

AI 산업재편, 작은 사업장엔 어떤 변화가?

조영신 월담노조 집행위원, 법무법인원곡 변호사

제조업을 피지컬AI 실험실로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

용현: AI 기술이 우리 삶을, 나라 살림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가꿀 수 있으리라는 장밋빛 전망이 파다한 요즘입니다. ‘AI 열풍’이라고 불러도 가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AI가 일의 세계에 이미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작은 사업장에 미칠 영향도 무척 궁금합니다.

영신: 사실 지금 AI 기술의 발전이나 도입은 세계적으로 봐도 이른바 ‘빅테크’라고 하는 몇몇 대기업이 주도해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전환 속도에도 기업별 편차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재정이나 기술 역량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작은 사업장은 아무래도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겠죠.

용현: 그래서일까요. AI 경쟁에서 ‘속도전’을 줄곧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도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에 중소기업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더라고요. 정부가 제조업 AI 전환에 집중하는 까닭이 뭘까요?

영신: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반도체, 피지컬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정부는 3대 분야 중에서도 피지컬AI를 도입할 승부처로 제조업을 꼽고 있거든요. 피지컬AI의 데이터 학습부터 현장 도입까지 한국의 제조업 환경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리하다고 정부는 본 거죠.

용현: 피지컬AI는 실제 물리적인 몸체를 가지고 현실 세계에 직접 개입하고 행동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런 기술을 굳이 인간과 닮은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어쩌면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과거엔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직립 보행도, 섬세한 손놀림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구현해 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영신: 맞아요. 현대차 아틀라스가 세상에 공개됐을 때 저도 그런 섬찝한 감정부터 생기더라고요.

용현: 피지컬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을 생각하면,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영신: 피지컬AI가 상용화되더라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 인간이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신체적인 부담이 높거나 위험도가 큰 업무들이 우리 사업장에 있다면, 그런 일을 피지컬AI가 대신하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공정에서 피지컬AI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협업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인간 노동을 무조건 피지컬AI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노동자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높은 작업이거나, 위험 부담이 큰 경우, 이런 상황에서 오는 압박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 피지컬AI를 활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AI 기술이 초래한 변화, 적응하기를 넘어 제어하기로

용현: 어쨌든 AI의 도입이 노동자들에게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네요. 노동법도 바뀌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신: 맞습니다. 이미 AI 경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AI를 도입하기 전에 협의하고,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용자는 AI의 편향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노동자의 이익제기 절차를 보장해야겠죠. AI는 도구일 뿐, 책임 있는 주체는 결국 인간이니까요. 사용자가 AI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핵심일 텐데요. 이러한 내용이 이후에는 노동법 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현: 노동자들의 알 권리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AI를 쓰고 있는지, 쓰고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노동자들도 알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하잖아요.

영신: 물론이죠. 노동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계약에서 비롯되는 관계잖아요. 쌍방 계약 관계예요. 일방이 계약에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다른 일방은 그 부분에 대

해 알 권리가 있죠. 노동자들의 알 권리에 기반해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알고리즘 감시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편향성이나 공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현: ‘스마트 안전보건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작은 사업장에도 속속 적용되고 있는 AI 기술도 있잖아요.

영신: 사실 AI 기반 안전보건기술이라는 게 그리 유별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작업자가 구동 중인 기계에 접근할 때 자동으로 인체를 감지해서 기계작동을 멈춘다거나 위험경보를 알리는 시스템은 이미 여러 작업 공정에서 활용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분야에서 CCTV 영상이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노동자의 불안정한 작업 상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도 적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AI 기술을 탑재한 안전장비나 시스템 도입을 이제 정부가 안전관리 인력이나 재정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용현: 그렇군요. 인적 자원이든 재정적 측면에서든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작은 사업장에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는 건 어쨌든 잘된 일 아닌가요?

영신: 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이런 안전보건기술 도입이 현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AI가 위험 상황이 아닌데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든지, 반대로 위험 상황이 맞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작업자의 행동이나 얼굴 표정 등을 인식해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탐지하는 AI 기술도 있잖아요. 이런 실시간 관제 시스템은 최초 도입 목적이 산재예방이라고 해도 노동자가 성실하게 작업하는지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스마트 안전보건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위험을 작업자 스스로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용현: 역시나 현장에서도 AI 기술이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새겨둬야겠네요. 결국 피지컬AI든 스마트 안전보건기술이든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와 충분한 협의를 기반으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산공동체라디오 단원
FM <월담의 노동it수다> 75
회 방송 다시듣기.